도박 치유 수요 늘지만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

도박의 늪, 무너지는 일상

〈3〉안전망 현주소

지역사회 서비스 21억여원 등 감소

북구 예방치유센터 홍보·인력 한계

전남권역 신규 센터 내달 여수 개소

"접근성 개선·지역사회 관심 필요"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상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예산·지역별 접근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들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까지 대폭 삭감되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도박중독 치유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사회 기반 도박치유·재활 서비스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1억원 줄어든 84억3천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치유·재활 사업 활성화 예산도 7억1천만원 삭감된 6천만원에 그쳤다. 이 밖에도 ▲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7억6천만원(1억5천만원 감소) ▲예방·치유 전문인력 양성 9천700만원(2천400만원 감소) ▲예방사업 운영 4억4천만원(1억8천만원 감소)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줄줄이 축소됐다.

김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장에게 "'2025년 사행산업통계'에는 청소년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가 지난해에만 1천700여명 늘었다고 한다"며 "중독 예방, 치유, 홍보를 훨씬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전남광주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북구 용봉동에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1곳이 운영 중이며 12월4일 여수에 신규 센터가 문을 연다. 이후 기존 센터는 '광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여수는 '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역시 월평균 80-120명 정도가 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총 15개의 센터 중 중앙센터에 해당하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센터들은 위탁 운영 형태인 탓에 세부적인 지원 규모와 사업 내용 등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다. 현재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센터는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 중이다.

센터 업무는 크게 예방홍보와 치유재활 서비스로 나뉘지만, 인력과 예산이 상담 등 치유재활 프로그램에 집중돼 예방사업과 대외 홍보까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이들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인 인식과 개선 의지로 찾아간다. 때문에 센터의 존재와 역할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필수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큰 매체 홍보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제한적이다. 지리적 접근성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센터는 전남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상담·예방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이용자 비율은 광주 권역 7, 전남 권역 3 정도로, 대부분 광주 권역 이용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화상상담 체계가 구축돼 원거리 이용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고령층에게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한다. 여수에 전남권역을 담당할 신규 센터가 다음달부터 운영을 시작하면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상담 접근성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긴 하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다는 것이 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광주전남도박문제치유예방센터 관계자는 "도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예방·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과 홍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박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2026년산 추곡 수매 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동곡농협본점에서 2026년산 추곡 수매 공공비축미 매입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경선 후보 비방 피켓 시위 주도 11명 검찰 송치

서부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피켓 시위를 준비하고 참가자를 동원한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10일과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특정 경선 후보를 비방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이용해 시위를 준비하거나 참가자를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이나 표시물의 설치·게시를 제한하고 있다.

당시 두 차례 시위에는 각각 10여명과 40여명이 참여했으나, 이 중 상당수는 시위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참가자는 '새봄맞이 청결 활동' 명목으로 치평동 일대에서 청소 봉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피켓을 건네받아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연상 기자

고용노동부, 대불산단 불시점검서 안전관리 부실 확인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11명 사망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적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대불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 11명이 숨진 가운데 정부의 불시점검에서도 다수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오전 대불산단 내 조선업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고소작업과 화기작업 등 고위험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작업장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승강용 사다리 등 안전시설이 일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기 배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됐으며 고소작업대 작업 시 작업지휘자와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보행통로와 차량 운행구역이 구분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요인도 발견됐다.

이에 류 본부장은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과 연계해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대불산단은 조선 기자재와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밀집한 곳으로,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과 절단·용접 등 위험 작업이 많다. 이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가운데 4명은 외국인 노동자였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컨설팅과 재정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서류작업만으로 달성할 수 없으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찬웅 기자

광주공소청, 영장과 다른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석방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사실이 드러나 공소청이 해당 피의자를 석방했다.

3일 광주지방공소청에 따르면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봉진)는 지난달 30일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약 271억원을 세탁하고 대포계좌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이 사건을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 사건 수사 기록을 확인하던 중 구속 피의자 7명 중 1명의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송치 혐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피의자는 당초 대포통장을 양도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단순 통장 양도자가 아닌 자금세탁 조직의 공범으로 확인되면서 혐의가 변경됐다.

그러나 경찰은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절차 없이 해당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소청은 기존 구속영장으로는 구속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송치 당일 구속을 취소하고 해당 피의자를 석방해 불법 구금을 방지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적법성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함께 위법한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